

제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월 11일(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
2.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
 - 가. 해양개발사업소
2.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가 109만 시민이 하나 되어 통합 창원시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해였다고 보면 올해는 실질적인 통합 원년으로서 세계명품도시로 도약,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열중하며, 행정과 의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위치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 가. 해양개발사업소

(10시12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한결같은 성원으로 해양개발사업소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묘년 한 해에도 우리 사업소는 세계속의 명품도시라는 비전 아래 모든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신항만이 우리시 발전의 기회로 승화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신항만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당면현안사업인 제3차 항만 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신항만 건설은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구축을 위해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창원시 웅천동, 웅동 및 부산 가덕도 해역 일원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30선석을 비롯한 일반부두 1선석 등 총 31선석을 개발하기 위해 총사업비 11조 7,996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11년 1월 현재 신항만 건설사업 추진사항은 부두 18선석을 완공하여, 개장 운행 중에 있으며, 배후부지 조성 개발규모는 1,090만㎡로 307만㎡의 북권 배후부지는 금년 중에 준공 예정이며, 358만㎡의 용동 배후부지는 공정 67%로 1단계 부지 63만㎡에 대해 입주업체 16개사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부산항 신항의 기본방향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물류, 휴양, 관광 등이 조화된 명품브랜드 항만, 동북아 물류중심 허브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부산항 신항의 주요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두를 지정 31선석에서 36선석으로 5개 선석을 증설하고 항만배후부지는 248만㎡의 서권 배후부지를 신설하며, 기타 시설로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 3단계 방파제 및 진입도로 개설, 수도·연도·송도의 절토, 친수시설과 임항철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1개선은 기존의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우도 서남단, 옹도 서북단, 지리도 서남단, 가덕도 남측 끝단까지 확장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동해양관광단지과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며, 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에 관련 기관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립하고, 전문가 정책 자문 및 대응논리 개발, 관계기관 대책 협의,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2월에는 우선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협의하고, 경남도에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되도록 하고,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기관과의 전략적 대응논리와 지역발전 극대화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 시가 세계속의 명품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 환태평양을 잇는 변영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수립 흐름도와 5페이지 참고자료, 9페이지 지역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산 가포신항 및 해양신도시 추진현황입니다.

마산 가포신항 및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선박의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류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가 가포 신항만 개발을 추진하면서 마산항을 운항하는 대형선박의 항로수심 확보를 위해 항로준설공사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구 마산시에서도 도시개발 가용용지가 부족하여 해양신도시 건설을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마산항 개발사업은 민자사업인 가포신항개발에 3,091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 착공한 후 현재 공정 67%로 금년도말경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 589억원의 항로준설공사는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6,553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마산해양신도시사업 가포지구는 항만배후단지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서항지구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도출한 조정안은 첫째, 가포신항만 부지 25만평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둘째, 준설은 하되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법, 셋째 준설은 하되 준설토를 외해에 투기하여 매립하지 않는 방법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조정안에 대한 설명 및 국비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조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TF팀에 참여하여 가포신항 용도변경을 주장하였으나 민간투자자는 정부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적법하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마산항 개발에 따른 소요비용 약 5,800억원을 용도변경 시 국비지원 불가로 시가 부담하라는 입장인 반면에 협상 장기화 시 사회적 논란만 우려되고 정부, 우리 시 책임부담만 증가하므로 매립면적 최소화 등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소장님, 박철하 위원입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을 보면 이것은 진해의 바다를 그냥 잠식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어민의 실소득이라든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가 공히 합심하여 이것은 절대 불가, 어떤 투쟁을 벌여서라도 국토해양부와 싸워서라도 꼭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신항만 2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이번에 변경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항계에서 우리 창원시 쪽, 진해쪽으로 확장되는 사업내용으로서 그 확장된 구역 내에는 어촌 어업인들 면허가 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어업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 또 서항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5선석이 추가되는 것은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목재부두 1선석과 컨테이너 부두 양쪽에 2선석씩 해서 4선석 총 5선석이 증가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경관과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시의 실익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시의회는 물론이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변화되는 내용을 분석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철하 위원 이것은 창원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시민 전체가 다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소장님,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이 계획안이 변경되고 기정에서 3차로 변경되면서 늘어나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다 잃었고 또 그 때 당시에 갈따구 때 때문에 어업장을 잃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에서 싫어하는 것은 모두 창원 쪽으로 오고 또 창원에 있는 경계구역 해안선도 부산이 유리한 쪽으로 다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준설토를 늘리겠다. 그러면 어업인들에 대해서 어업권을 뺏으면서 협의한 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아직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방안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토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3차로 늘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저희들도 직접 고시가 되지는 않았고 당초에도 명동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 구역에 항계선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항만시설 예정부지로서 이미 고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통보받은 것은 아니고 11월말쯤에 이러한 내용의 항만기본계획이 해양관광단지의 향후 추진방향과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3차 항만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말쯤에 부산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간담회를 갖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듣고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고

○강기일 위원 소장님, 항만을 부산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항 있잖아요. 가덕도 공항 가져갈 때 자기들이 주장하기는 형제도시이니 자매도시이니 이렇게 하고 남강 물 가져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도시니 뭐니 말해 놓고 그럼 형은 좋은 것 다 가져가고 동생은 쓰레기나 목재 같은 것만 가져옵니까? 공평하게 갈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공항 준다고 합니까? 그런 약속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변경사항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대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대응전략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TF팀도 구성해서 대응전략을 조기에 개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제3차 항만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정보가 늦었다느니 늦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명동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보면 2010년도 3월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항만관련 부지를 친수시설로 하기도 하고 2010년 1월에 보면 제1차 국가 마리나항 기본 계획 반영 고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면서 했던 것 아닌가요?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 때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기본계획안에 명동해양관광단지를 친수시설로 해 줄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 3차 기본계획의 윤곽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는 친수시설로 사실 명동지구에는 조그마하게 같이 병행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때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명동해양관광단지 등 우리 창원시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친수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는 됐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실제 감지를 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협상을 하면서 국토해양부 계획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2월에 시도지사 협의를 해서 3월에 고시할 예정인 것만 저희들이 알았지 그 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말에 내용을 알고 그때부터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1차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 고시해서 10페이지 업무보고에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2010년도 1월에 제1차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 고시에 명동지구 50척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 할 때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한 것 아닌가요? 국가 마리나항 이것 할 때도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획은 국가 마리나항 계획에 50척이 반영되어 있고, 창원시에서 662척 해가지고 관광단지를 진짜 거점도시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일부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충족이 되지는 않지만 거기도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를 아주 축소해서 친수시설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규모가 축소되어서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 역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단지의 거점도시로서 발전되는데는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들도 수정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정건의를 하면 수정건의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여론과 우리시의 실정을 계속 요구해서 우리시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게 사후약방문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창원시든 경남도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구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라도 대응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창원시에 될 수 있으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짚어주셨습니다만 실제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가가 바라는 대로 추진되었다가는 통합이 되고 우리시가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명동해양관광단지 부분에 굉장히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봐지구요.

오늘 소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창원시에서 기존 가지고 있던 계획 특히 해양 시대에 해양문화발전과 미래성장산업인 해양 쪽에 개발 컨셉을 갖고 창원시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창원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지장이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창원시 계획이 지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시 입장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속인 안홍준 의원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정쌍학 위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항만 3차 기본계획 관련 간담회를 부산에서 가질 때도 경남도나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물론이고 경남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일은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고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모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은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말로 이 문제가 앞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목재부두가 들어서고 신항의 컨테이너 특화 및 신항만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어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분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처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을 보면 정말 뭔가 이용을 당해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갔다는 생각밖에 안 듣거든요.

작년 3월부터 5월, 6월, 11월 24일날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립 설명회를 했죠? 그 안에 준설토 투기장을 한다고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축소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아예 준설이 안 되어야지 어떻게 축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미 작년 12월 3일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되었어요. 이렇게 대응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12월에 국토해양부로 의견이 전달된 것이 아니고 당초 작년 11월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 용역회사에서 대전청에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회에 우리 직원들이 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작년 12월 7일에 부산지방항만청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남도와 창원시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한다는 공문조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항만 동향을 파악하면서 신항만 동향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청에 물어본 결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강기일 위원 됐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대응전략이 늦다는 것이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다 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양개발과에서는 알 수가 있었다. 대응전략이 늦었다고 하는 것은 향후계획에 2011년 1월달에 민간투자자 유치를 추진하는 계획이 나와 있죠? 신항만 건설사업에 이 민간투자유치를 6조 5,500억 원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아닙니다. 이것은 명동해양관광단지 주변에 일단의 시설을 비롯해서 명동해양관광단지에 대한 민간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항만이 아니고 명동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창원시의 투자자 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2011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를 변경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이것 역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명동해양관광단지에 대한 7개 도서를 포함해서 유원지시설을 해서 관광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유원지 결정고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준설 투기는 안됩니다. 준설 투기는 강력하게 막아야 되고 지금 현재 어업권을 아직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있고, 어민들 1%라도 어민들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진해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업보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그런 것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에게 보상문제라든지 준설투기장에 대한 일정부분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현재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재부두를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컨테이너 수출 물량은 부산항만에서 하고 우리 창원 항만에는 목재 재어놓고 우리 부두는 컨테이너 사용은 할 필요 없고, 부산 쪽에서 보면 자기들은 컨테이너 수출 쪽을 하고 우리 창원은 목재 같은 것 쌓아놓고 창고 역할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에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설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집행부에서 대응전략을 면밀히 짜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앞으로 도와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파악한 대로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개발사업소의 주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저희 해양개발사업소의 주 업무는 전체적인 해양개발로서 관광단지라든지 해안선이 이미 얘기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3번째로 긴 해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해양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5대양 6대주를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개발사업과 로봇랜드추진 사업을 하고 있고, 신항만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항만에 따른 발전전략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 국제사업과 연계하는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지금 국토해양부와 직속체계가 행정의 수직체계라면 지금 직속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부산은 수산국이 있죠? 부산시는 해양수산국이 있고 우리 경상남도도 수산과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수직체제로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우리시에는 해양개발사업소가 있고, 별도로 수산관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시민들의 불만소리를 들어보면 우리시에는 국토해양부와 수산관련부서가 한마디로 파위가 약하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에는 수산과가 있고 부산시는 수산국이 있고, 그래서 부산시는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공조가 되는데 경상남도도 한마디로 소외 받았다는 결론밖에 지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도 지금 현재 로봇랜드 등 남해안 선벨트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말로 이런 부서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조직도가 우선 짜져야 된다고 봐지구요.

그 다음에 수도, 연도, 송도지역에 1,400여명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생업대책,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업권보상은 받았다고 보지만 생계대책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중앙정부와 수직채널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다보면 명동해양관광단지에 이미 진해해상공원 같은 경우는 4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광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항에서 부산 감천항에 20년, 30년 정말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던 목재부두가 우리시 청정해역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세워놓은 곳에 목재부두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도 부산신항 제3차 개발계획을 꼭 살펴봤습니다만 자동차부두, 보세부두 등 정말 알짜배기 부두는 부산으로 다 가져가고 지금 현재 창원지역에 있는 신항에는 목재라든지 컨테이너도 탐탁지 않은 것만 우리 지역에 넣어놓았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강물 가져갈 때는 형제자매이고, 부산시에서 애물단지는 우리 지역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은 한마디로 부서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채널로 볼 때 이미 그 분들

은 막강한 힘을 가진 부산시 행정이고, 경상남도를 떠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세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시민들이 얼마나 현재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 제3차 기본계획을 박살내고 새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계획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현재의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앞으로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업은 정말로 지자체간에 신항은 부산항이라고 얘기하지만 부산항 태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부산항에서 자유자재로 배치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자체가 부산과 경남이 틀린 상황이고 또 우리 경남도 내에서도 창원시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상남도가 나서서 막아줄 것이며, 또 우리 창원시민의 심정을 얼마나 알아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명히 이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시장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마산 가포신항 및 해양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매립을 하지 않고 해양투기를 하는 방법은 현재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국제적인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런 문제도 있고 외해에 투기할 때는 비용이 230억이 더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민간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일단은 모든 방면에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설하되 준설토를 외해 투기하는 것은 소위 준설량에 대한 배정문제, 추가소요되는 비용의 문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목적하는 시기에 가포신항의 준공목표에 절대적인 공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당장 채택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 역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의 합법적인 경제활동, 투자비용의 투입, 당사자인 민간투자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정부에서도 역시 용도변경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근거부족과 그에 따른 비용문제 등 해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안으로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어차피 여러 가지 투입된 비용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만도 유지하고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으로 적정규모의 준설을 해서 매립하는 방법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양부에서 고시를 해서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가포 신항만을 준설해 주겠다고 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사비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 67% 공사착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67%는 가포신항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 그 사업은 가포신항과 항로준설은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수부에서 하고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가 무역항이고...

○강기일 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다가 안 보이는 조망권 문제와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 환경오염 처리문제와 바람길이 기존 있는 도시에 아예 바다가 안보이니까 바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낮춘다든지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기존 도시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존의 도시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어느 시민들이라도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지금 설명 드린 것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문제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들과 상충되지 않고 서로 상생하고 윈윈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통합 도시가 되면서 기존 도시의 시민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포신항 해양신도시를 추진하면 그 때 통합되기 전에는 국가가 추진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면 그 목적이 맞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바다 준설을 해가지고 이쪽에 또 마산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다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쪽에는 새롭게 큰 도시가 탄생해서 구 시의 시민들은 재산권이나 모든 경제성이 활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하루빨리 찾아내고 시민단체가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서 집행부가 옳은 대안을 내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해양신도시 최적안을 국토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만들고 있는데 최적안을 도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상충하지 않고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대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재 한 개도 매끄럽게 풀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해 항구도 그렇고 가포신항 문제도 그렇고 신도시 문제도 그렇고 바다 준설, 준설토 투기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법하게 풀 수 있는 전략을 철두철미하게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신항 쪽에 제3차 기본항만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불가합니다. 온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절대 저지를 해야 될 일이고, 마산신항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고 물론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조목조목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좀 설득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는 5,800억이라는 돈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어차피 마산신항 쪽으로는 큰 배가 들어가려면 수위가 낮아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인선을 끌어다 배를 끌어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준설은 국가에서 해주니까 하고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준설범위를 축소시켜서 거기에 신도시 건설은 불가하다고 하니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복합타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친수공간을 만든다든지 방향을 확고히 해줘야만 한 걸음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서는 그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명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재홍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 건의안을 바로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은 1월 7일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결집하고, 간사를 발의자로 전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제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

(10시59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하 간사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박철하 간사입니다.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국토해양부가 정책 입안하고 있는 위 계획안이 극심한 시민생활 피해 초래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자는 결의에 따라 저를 비롯한 전 위원이 찬성하여 서면으로 동의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이유는 정부가 위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생계와 지역현안이 직결된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

역여론은 도외시한 채 밀어붙이기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입안으로, 항계선 확장으로 인한 어민 생존권 박탈, 준설토 투기장 조성규모 확장과 목재부두 신설로 청정해역 생태계 파괴와 해양미관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는 바, 지역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부산항 신항이 국제항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창원시가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웅비할 핵심전략인 명동 해양관광단지 해양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요지는 첫째, 제3차 항만 기본계획안 변경 항계선을 기존 항계선으로 수정해 줄 것. 둘째, 과도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규모를 축소해 줄 것. 셋째, 신항 건설목표와 특화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목재부두는 부산항 부두별 기능재배치 시에 검토할 것. 넷째, 명동 해양관광단지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기본요건인 해양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지역구 국회의원 다섯 분, 국토해양부장관, 경상남도지사, 부산광역시 등입니다.

지역사회 백년대계를 염려하여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결의한 사안인 만큼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위원 간담회 시 의견이 결집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건의안은 제안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1시 30분에 본 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결집된 의견과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제2차 본회의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전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해영 박철하 공창섭
- 강기일 방종근 황일두
- 정쌍학 송순호 장병운
- 홍성실 조재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규영
- 전문위원 김정수

○출석공무원(2인)

-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 항만물류과장 박동제